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시점 놓고 막판 고심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경찰과 세무 협의 계속 일각선 '특혜' 지적...영장 유효기간 소진 우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법 소지 차단을 위한 점검과 함께 최적의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좌고우면하면서 영장 유효기간을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제시한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을 내일 앞두고 있지만 아직 집행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저녁이 가까워진 만큼 이날 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체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1부장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창진 수사2부장이 사직 처리된 이후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소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협의해 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기본적인 방침도 세웠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분

담 및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등 세부적인 부분에 조율할 것이 남아 있어 이날 집행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과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일에는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것을 문제 삼으며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추가 권한쟁의심판도 내

기로 했다. 여론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함하다"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저에 모인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시에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도록 추동하는 '방침'을 간접적으로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장 집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체포에 나서는 통상적인 수사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형사 사건 피의자와 달리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동은 공수처장은 전날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외는 지킬 것"이라며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체포·구속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형소법상 준항고 조항 토대...서부지법 재판단 주목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작년) 12월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급,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자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존 체포·수색영장 발부 결정이 형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의신청이라는 형태만 놓고 보면 현행 형소법상 명확히 규정된 방법은 아닌 형태다.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닌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민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해서는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발부될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尹관저 앞 지지자들 드러누워...경찰 강제해산 '아수라장'

연행 과정 "윤석열" 외쳐...5차례 해산명령 끝 실행 비상행동, 현장서 '대통령 탄핵촉구' 맞불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누는 연좌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 끝에 강제 해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가 연행됐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20분경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

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관저 내부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셈이다. 이에 경찰도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선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스크림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버텼다. 목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팻대를 울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5차 해산명령을 내린 후 시위자들이 도로를 침범했다고 판단해 오후 4시37분경 기동대를 투입해 지지자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옮겨 강제 해산을 실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2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연행되며 "윤석열"을 외치기도 했다. 관저에서 200m쯤 떨어진 국제루터교회 앞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 약 1만1천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 올라 "탄핵에 반대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만 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도 관저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에 나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동조 세력들은 (체포영장 집행) 저항하고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검찰, 신원식 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앞서 국방부장관 재직 중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중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 "인방"이 진급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요 사령부 사령관은 군단장급(중장) 보직이다. /연합뉴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경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